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3(금) ~ 2025.10.9(목)

제공일시 2025 10 17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3(금) ~ 2025.10.9(목)

제공일시 2025 10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글로벌 정책

1. 중국 희토류 0.1%만 써도 中 정부 수출 허가받아야

- 중국 상무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(AI) 산업에 쓰이는 희토류뿐 아니라 채굴, 제련, 분리 등 관련 기술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함
- 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,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희토류 품목은 개별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함
- 중국산 희토류 원료가 0.1% 이상 포함된 외국인 제품까지 수출 허가 대상이 돼, 한국과 일본 등 제3국 제품도 통제 영향권에 포함됨

[\(서울신문 2025.10.9\)](#)

2. "유럽 전략적 자율성 확보" EU, AI에 1조6천억 투자

- 유럽연합(EU)이 역내 산업의 인공지능(AI) 활용을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억유로(약 1조6580억원)를 투자하기로 함
- EU 집행위원회는 로봇공학, 헬스케어, 에너지, 제조, 방위 등 11개 산업에서 AI 활용을 높이는 전략을 발표했으며, 예산은 연구개발(R&D) 프로그램인 '호라이즌 유럽'을 통해 조성됨
- 이번 조치는 미·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, 헬스케어·제약·농업 등 주요 산업에 AI 적용을 본격화할 계획임

[\(매일경제 2025.10.9\)](#)

3. IEA, 글로벌 재생에너지 성장 전망 하향...美·中 정책 변화가 주요 원인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가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이유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력 용량 증가 전망치를 기존보다 900GW(기가와트) 낮춘 4600GW로 수정함
-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'원 빅 뷰티풀 빌 액트(OBBBA)'로 세계 혜택이 축소되며 성장률이 50% 감소했고, 중국은 고정가격매입제도(FIT) 종료로 재생에너지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
- IEA는 중국의 정책 전환이 2025년 이후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,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촉구함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10.8\)](#)

국내 정책

1. 국회 "수송부문 탄소배출량 고려한 합리적 세율체계 필요"

-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'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' 보고서에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,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
-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감축 실적이 1.7%에 그쳐 저조하다고 지적하며, 탄소배출량에 기반한 세율 설계와 저탄소 기술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함
- 탄소세 시나리오 적용 시 2035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이 최대 10.5% 추가 감축되고, 세수는 약 29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세정책이 기후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됨

[\(투데이에너지 2025.10.8\)](#)

2.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'의무'인데... 왜 전기요금 원가는 깜깜이?

- 법적으로 매년 공개해야 하는 전기요금 원가 정보가 2023년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,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당국의 '전기요금 총괄원가 과다 산정 검증'을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
- 2010년부터 시행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의무에 따라 가스공사·철도공사 등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, 한전은 감사원 지적 이후 연료비 연동제 검토를 이유로 정보를 미루고 있음
-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요금 현실화와 원가 공개가 분리 운영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며, 한전의 적자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함

[\(조선비즈 2025.10.7\)](#)

3. 해상풍력 보증에 예산 4000억 배정했는데...기업 신청 0건

- 산업통상부가 올해 5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시작했지만, 8월까지 신청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
- 해상풍력 외 재생에너지·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36개 기업이 신청해 13곳이 실제 보증을 받았으나, 해상풍력은 PF 대출만 지원 대상이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
- 전문가들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업·시설 자금 등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,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

[\(서울경제 2025.10.9\)](#)

글로벌 기업

1. 韓기업과 수소·배터리·모빌리티 협력 원해

- 아흐마드 바그흠 마스다르시티 CEO가 한국 기업들과 그린수소, 배터리 저장, 첨단 모빌리티, 지속가능 건축자재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힘

- 마스다르시티는 지멘스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(IRENA) 등이 입주한 중동 최대 친환경 클러스터로, 한국전력·두산중공업·현대건설 등과 기술 협력을 진행 중임

[\(매일경제 2025.10.9\)](#)

2. 토요타·스바루, 美서 전기차 배터리 집단소송…“잦은 방전 문제”

- 토요타와 스바루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 'bZ4X'와 '솔테라(Solterra)'의 12볼트 보조 배터리 결함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함

- 차량의 보조 배터리가 몇 달 내에 반복적으로 방전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며,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포함됨

[\(지피코리아 2025.10.8\)](#)

3. 셸 재생에너지 광고, '그린워싱' 논란 벗었다…영국 ASA “소비자 오도 아냐”

- 영국 광고심의위원회(ASA)가 셸(Shell)의 재생에너지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'그린워싱' 제소를 기각함

- ASA는 해당 광고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닌 기업 간 거래(B2B) 홍보로, 특정 고객사 협력 사례를 소개한 것이며 셸의 전체 사업 모델을 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함

[\(임팩트온 2025.10.4\)](#)

4. 세일즈포스, AI 확장에 기후 전략 후퇴…절대감축 대신 집약도 목표로 수정

- 세일즈포스가 2030년까지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철회하고, '배출 집약도' 감축 방식으로 전환함

-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배출량이 증가하자 목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, 전문가들은 “실질적 감축이 아닌 수익 증가로 달성 가능한 목표”라며 ESG 공약의 신뢰성 약화를 지적함

[\(임팩트온 2025.10.4\)](#)

국내 기업

1. 삼성물산, 글로벌 SMR 시장 공략...GVH와 원전 협력 강화

- 삼성물산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(GVH)와 유럽·동남아·중동 지역 소형모듈원전(SMR)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
- 양사는 삼성물산의 EPC 역량과 GVH의 'BWRX-300'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SMR 사업 전 과정에 협력할 예정이며, 삼성물산은 루마니아·스웨덴·에스토니아 등에서도 SMR 사업을 확대 중임

[\(이투데이 2025.10.9\)](#)

2. "중국 소재 쓴 배터리 입찰 안 돼"...불붙은 '1조 ESS' 수주 신경전

- 1조원대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(540MW) 입찰을 앞두고 '중국산 배터리 사용 기업 참여 제한' 국민청원이 등록 이틀 만에 100명 동의로 공개 전환됐으며, 청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중국산 소재 선호를 지적함
- 업계는 LFP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 의존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국산화 라인 구축 지원, R&D·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함

[\(디지털타임스 2025.10.9\)](#)

3. '삼성·현대 주도' 해외건설 수주 중동 일색, '비자 리스크'에 미국 신규 일감 안갯속

- 삼성물산·삼성E&A·현대건설이 중동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를 이끌며 1~8월 해외건설이 372억4000만달러를 기록, 연간 450억달러 돌파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한수원·두산에너지빌리티까지 원전 수주로 상위권을 형성함
-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B-1·ESTA 활용 등 협의가 있었지만 수수료 인상과 전용 비자 부재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, 테일러 반도체·현대차 배터리 등 기존 현장 마무리로 신규 일감 공백 우려가 제기됨

[\(비즈니스포스트 2025.10.9\)](#)

4. ESS에 희비 갈린 3분기...LG엔솔 '맑음', SK온·삼성SDI '흐림'

- LG에너지솔루션은 ESS 판매 확대와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(AMPC) 수령으로 3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예상되며, 미시간 공장의 ESS 배터리 매출이 실적 개선을 견인함
- 반면 삼성SDI는 BMW 수요 부진과 중국산 LFP 배터리 확산으로 4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, SK온도 전기차 시장 둔화와 고정비 증가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옴

[\(디지털데일리 2025.10.8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3(금) ~ 2025.10.9(목)

제공일시 2025 10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EU 기업 70%, 규제 완화 반대...“지속가능성 의무가 경쟁력”

- 유럽연합(EU)이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, 유럽 기업 다수가 지속가능성 의무 유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
- 기후 싱크탱크 E3G와 글로벌 조사기관 유고브(YouGov)가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폴란드, 스페인 등 5개국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
-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‘옵니버스 I 패키지’ 논의 과정에서 시행돼,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음. 해당 패키지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(CSRD)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(CSDDD)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함
- 응답 기업의 70%는 보고 기준을 1000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, 이 중 절반은 500인 이하 기업에도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. 반면 1000인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5%에 그쳐 완화 지지가 소수에 머물렀음
- 중견기업(직원 250~999명) 70%가 지속가능성 보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,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도 이에 동의함
- 기업 55%는 “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경쟁력에 중요하다”고 답했으며, 50%는 “정기적 데이터 수집·보고가 투자 기회를 넓힌다”고 평가함
- 68%는 “EU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의 모범이 돼야 한다”고 답했으며, 반대는 10%에 불과했음
- 과반수 기업은 대기업이 소규모 공급업체로부터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, CSDDD의 적용 범위를 간접 공급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%로 나타남
- 응답 기업의 63%가 “대기업은 녹색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답했으며, 이는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 경쟁력과 투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
- E3G는 “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행정 절차가 아닌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”며, 정책당국의 규제 완화 접근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함

[\(임팩트온 2025.10.4\)](#)